

# KWDI

## 해외통신

2021년 10월 (2021.10.1 ~ 10.31)



### 스페인 SPAIN



#### 스페인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추진 계획 발표

곽 서 회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2021년 7월, 스페인 사회권리부 장관(Minister of Social Rights) 이오네 벨라라(Ione Belarra) 장관은 출산휴가 기간을 24주로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출산휴가란 남성 근로자들의 배우자 및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모두 포괄한다.
- 벨라라 장관은 가족 다양성 및 가족 지원에 대한 법률 지원 내용 관련 기자회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영아 공공교육 시스템을 0-3세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벨라라 장관은 본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첫 몇 해 동안은 훨씬 더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16주는 부족하며,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4개월간의 출산휴가 후 업무로 복귀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면서 공공보육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현재 스페인 남녀 근로자 모두 각 1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모두 법정 기본임금의 100% 유급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주어진 출산휴가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돌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6주 중 6주는 의무적으로 자녀 출산 직후 사용해야 한다.
- 사실 스페인은 이미 2021년 1월,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여성의 출산휴가와 동일한 기간인 16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자녀가 태어나면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는 단 이틀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이루었다.

#### 참고자료

- AS(2021.07.15), "Se ampliará la baja maternal y paternal a seis meses: así es en el resto de Europa", [https://as.com/diarioas/2021/07/15/actualidad/1626331306\\_906987.html](https://as.com/diarioas/2021/07/15/actualidad/1626331306_906987.html) (접속일: 2021.10.29.)
- El Pais(2021.01.06), "Something to celebrate for new fathers in Spain, as paternity leave extended to 16 weeks", [https://english.elpais.com/spanish\\_news/2021-01-06/something-to-celebrate-for-new-fathers-in-spain-as-paternity-leave-extended-to-16-weeks.html](https://english.elpais.com/spanish_news/2021-01-06/something-to-celebrate-for-new-fathers-in-spain-as-paternity-leave-extended-to-16-weeks.html) (접속일: 2021.10.29.)
- European Commission, "EU rights to work-life balance",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women-labour-market-work-life-balance/eu-rights-work-life-balance\\_en#right-to-paternity-leave-as-of-2-august-2022](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women-labour-market-work-life-balance/eu-rights-work-life-balance_en#right-to-paternity-leave-as-of-2-august-2022) (접속일: 2021.10.29.)

이와 같이 스페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된 데에는 스페인 사회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옹호활동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스페인의 한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Platform for Equal and Non-transferable Birth and Adoption Permits (PPIINA, Plataforma por los Permisos Iguales e Intransferibles de Nacimiento y Adopción)’은 10여 년간 해당 의제로 정책 로비활동을 펼쳐 왔다. PPIINA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 PLENT(Platform for Equal and Non-Transferable Birth and Adoption Leave)의 스페인 지부 격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육아에서 성평등을 추진하고 남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 육아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개인 및 단체들이 협동하여 정책 옹호활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표가 남녀 모두 100% 유급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이다.

- The World (2021.01.21), “Can Spain’s new paternity leave law address entrenched gender roles?”, <https://www.pri.org/stories/2021-01-21/can-spain-s-new-paternity-leave-law-address-entrenched-gender-roles> (접속일: 2021.10.29)

PPINA의 마리아 파조스(María Pazos) 대변인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추진 배경으로 남성이 자녀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여성은 그만큼 일·가정 양립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남녀 동일한 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조건이라면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출산휴가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본 것이다. 또한 파조스 대변인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받게 된다면 남성 근로자들도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실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라라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휴가 확대방안은 모든 아동은 동일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규범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부모, 사실혼 관계 부모와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포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개정되는 출산휴가 부분에서는 이를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벨라라 장관은 스페인에서 요즘 출산이 빈곤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보다 질적으로 훌륭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예산 관련 정책 논의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 초안은 올해 연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9년, 남성 근로자에게 자녀 출산시 최소 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지침(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유럽연합 지침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남성 근로자가 최소한 국가별 병가휴가 제도에 따른 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상하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10일 보장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각기 다른 세부 규정이 있고, 제시하는 기간이 10일에 불과하며, 지침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해당 이슈를 제도적으로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은 회원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유럽연합 지침을 기준으로 스페인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다시 한번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를 24주(6개월)로 대폭 확대하고자 하고 있어,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제도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6개월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여성의 출산휴가는 고용주 및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실제로 정부가 현 제도를 본격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찬반 논쟁이 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만 하다.

## 독일 GERMANY



### 독일, 아버지 육아 참여율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2021년 10월 6일 발표한 ‘아버지 보고서(Väterreport)’에 따르면, 이전 세대와 달리 현재 독일 아버지들은 집안일과 가족 수입에 대한 책임을 파트너와 동등하고 나누고 자녀 양육에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여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를 분담하고 있지만 동등한 육아 분담을 원하는 많은 가구가 소망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서는 공식 통계, 과학 연구 및 대표적인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독일 아버지의 가족생활 및 직업 상황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의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혼한 아버지의 48%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방정부는 ‘육아휴직(Elternzeit)’과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이 더 많은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라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전보다 벌이가 감소한 부부나 파트너에게 최대 14개월까지 현 월급의 약 65~67% 정도의 ‘부모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전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를 지급한다. 아버지 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하는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12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나 파트너 중 한명은 2개월 이상을 반드시 휴직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버지의 42% 이상이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휴직수당을 받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터에서 아버지 육아휴직은 더 이상 예외 사례가 아니라 널리 사용되는 휴가제도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용 상황 차이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68%가 시간제로 일하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아버지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아버지가 육아휴직 후에도 대부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참고자료

- BMFSFJ(2021.10.08.), “Herbstferien mit dem 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 der Bundesregierung”,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herbstferien-mit-dem-aktionsprogramm-aufholen-nach-corona-der-bundesregierung-186344> (접속일: 2021.10.29.)
- BMFSFJ(2021.10.06.), “Väterreport. Update 2021”,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vaeterreport-update-2021-186180?view> (접속일: 2021.10.29.)
- BMFSFJ(2016.08.01.), “Die Familienarbeitszei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die-familienarbeitszeit—106806> (접속일: 2021.10.29.)

이와 더불어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의 바람과 실제 현실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트너와 육아를 동등하게 나눠 맡고 싶어 하는 부모 비율은 45%였지만, 실제 동등하게 육아를 맡고 있는 부모 비율은 17%였다. 또한 응답한 아버지의 52%는 덜 일하기를 원하지만, 어머니의 42%는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거나 지금보다 더 긴 시간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지원 방법으로 ‘좋은보육시설법(Gute-Kita-Gesetz)’과 ‘종일학교(Ganztagsschulen)’를 꼽았다. 독일은 좋은보육시설법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원)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709억 원)를 추가 책정한 바 있다. 추가 예산은 보육시설 확장과 신축, 위생상황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종일학교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 초등학생의 돌봄 교육을 위해 특별기금 40억 유로(약 5조 4,300억 원)를 편성했다.

이번에 발표한 아버지 보고서에서는 부모 모두 생계가 보장되고 원할 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근로시간모델(Familienarbeitszeit)’ 또한 주요하게 다뤘다.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가족근로시간모델은 법정근로시간 기준의 약 80~90%(주당 28~36시간) 일하는 어린 자녀의 부모에게, 매월 한화로 약 40만 원 정도 되는 300유로(아버지/어머니 각각 150유로)를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자녀의 8번째 생일날 전까지 총 24개월을 정해 받을 수 있다. 한부모나 따로 아이를 키우는 가족도 가족수당을 받는다. 한부모는 300유로, 이혼한 부모는 각각 150유로를 받는다. 이 제도는 자녀가 어릴 때 특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부모를 위해 도입됐다.

아버지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근무 환경 덕분에 파트너십 기반의 동등한 업무 분담이 가능해졌다는 분석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아버지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녀 보육과 보살핌에 더 많이 참여했다. 부모로 이뤄진 가구의 평균 아버지 일일 보육 시간은 기존 2.8시간에서 5.3시간으로 증가했다. 이는 89% 증가한 결과다.

반면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가족 관련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어머니의 하루 보육시간은 기존 6.7시간에서 43% 증가한 평균 9.6시간을 기록했다. 아버지 보고서는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0월과 11월 중 약 2주간 이어지는 가을방학을 위한 ‘코로나 이후 회복(Aufholen nach Corona)’을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이다. 주로 어린자녀를 둔 가족들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정부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총 2,300만 유로(한화 약 312억 원)를 제공했다. 독일 전역의 유스호스텔협회는 여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이프치히에서는 12세부터 16세까지 청소년들이 ‘쿨투어 캠프(Cool-tour Camp)’ 여행을 떠나며, 북동부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슈베린 호수에서 캠프 여행을 연다.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은 라인란트팔츠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어린이들은 2주간의 캠프 기간 동안 다양한 워크숍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독일아동청소년재단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8천만 유로(약 1,086억 원)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자원봉사재단에서는 농촌 지역 청년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 건강, 학습 및 여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연방 정부는 추가로 아동 및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7천만 유로(약 950억 2,500만 원)를 주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시민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과 안전법 추진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와 경찰이 시민 참여로 성범죄 우범 지역을 표시하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영국 의회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음란 영상물 등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Bill) 입법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본문에서는 2021년 9월 시행된 시민 참여 온라인 지도인 ‘스트리트세이프 (StreetSafe)’를 중심으로 영국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여성 보호 정책을 분석한다. 이어 온라인 안전법이 앞으로 온라인에서 사이버 성희롱, 리벤지 포르노 같은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어떻게 여성을 보호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 시민 직접 참여로 성범죄 우범 지역 온라인 지도 제작

2021년 7월 21일, 영국 내무성 (Home Office)는 런던에서 집에 가던 길 납치돼 목숨을 잃은 사라 에버라드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Tackl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를 발간했다. 2012년 3월 사라 에버라드 사건에 이어 9월에는 20대 여성 초등학교 교사인 사비나 네사가 런던 공원 근처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영국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 참고자료

- GOV.UK (2021.7.21.)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 (접속일: 2021.9.25.)
- GOV.UK (2021.10.3.)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given extra 23.5 million pound for safer stree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police-local-authorities-given-extra-235m-for-safer-streets> (접속일: 2021.10.25.)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이 바로 ‘스트리트세이프’다. 시범 정책으로 9월부터 시행된 스트리트 세이프는 시민들이 익명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공공장소나 언어 및 신체 폭력, 낯선 사람이 쫓아오는 경험 등이 발생한 장소를 온라인 사이트 (<https://www.police.uk/streetsafe>)에 직접 제보해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스트리트세이프에 등록된 정보는 경찰과 지방 정부가 성범죄 우범 지역을 파악하고, 추가 조명이나 순찰 인력을 배치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여성 표적 범죄 피해자 보호 추가 대책을 내놔다.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 여성 표적 범죄에 더 자주 노출되는 소수 인종을 위한 전문가 지원 서비스 및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등을 돕는 전화 상담 서비스 확충에 150만 파운드 (약 24억 2천만 원) 예산 투입
- ▶ 대학을 포함해 영국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봤을 경우, 학생들이 서명한 비밀유지협약 (Non-Disclosure Agreements)를 빌미로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패스파인더 (pathfinder)’ 프로젝트 개발

영국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보호 대책 중 유심히 살펴볼 정책은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학의 비밀유지협약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비밀유지협약은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영국 대학들은 학교의 대외 평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한 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영국 언론은 대학교수가 가해자일 경우 이들이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다른 대학으로 이직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알자지라 방송이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글래스고, 워릭 대학교에서 가해자인 대학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성추행 사건을 쉬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영국 교육부가 대학의 비밀유지협약 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비밀유지협약서 뒤에 숨은 가해자의 신상이 밝혀지고, 학생 피해자들이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의회, 불법 콘텐츠 유통 막는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Bill) 초안 검토 중

온라인 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사용자들을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21년 5월, 디지털 문화 장관 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금껏 영국 정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되면 스스로를 언론이 아니라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지칭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소셜 미디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GOV. UK (2021.5.12.) “Draft Online Safety Bill”,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033/Draft\\_Online\\_Safety\\_Bill\\_Bookmarked.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5033/Draft_Online_Safety_Bill_Bookmarked.pdf) (접속일: 2021.10.25.)
- GOV.UK (2021.7.21.) “Tackl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launch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tackl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strategy-launched> (접속일: 2021.10.25.)
- HM Government (2021.7.) “Tackl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05630/Tackling\\_Violence\\_Against\\_Women\\_and\\_Girls\\_Strategy-July\\_2021-FINAL.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05630/Tackling_Violence_Against_Women_and_Girls_Strategy-July_2021-FINAL.pdf) (접속일: 2021.10.25.)
- Aljazeera (2021.10.19.) “Oxford professors abused position with sexist and drunken conduct”,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0/19/oxford-professors-abused-position-with-sexist-and-drunken-conduct> (접속일: 2021.10.25.)
- The Guardian (2021.9.23.) “‘London streets are safe for women’, say Met after Sabina Nessa killing”,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sep/23/sabina-nessa-thought-killed-on-way-meet-friend-say-police> (접속일: 2021.10.25.)
- The Guardian (2016.8.26.)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by university staff hidden by non-disclosure agreement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6/aug/26/sexual-harassment-of-students-by-university-staff-hidden-by-non-disclosure-agreements> (접속일: 2021.10.25.)



📌 온라인 안전법 초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아동 착취 영상,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온라인 성희롱, 음란 게시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 정책이나 디자인을 바꾸는 등 소셜 미디어 이용에 변경이 생길 때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한 '위험 평가서 (risk assessment)'를 영국 정부가 허가한 방송 규제 기관인 오프콤 (Ofcom)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소셜 미디어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The Wall Street Journal (2021.9.14.)  
"Facebook Knows Instagram Is Toxic for Teen Girls, Company Documents Show",  
<https://www.wsj.com/articles/facebook-knows-instagram-is-toxic-for-teen-girls-company-documents-show-11631620739>  
(접속일: 2021.10.25.)

📌 특히, 최근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온라인 안전법 입법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 2021년 9월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지난 3년간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조사를 했고, 대다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해 10대 소녀들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안전법 초안을 논의하는 영국 의회 공동 위원회 (Joint Committee) 위원인 데미안 콜린스 보수당 의원은 "페이스북이 (청소년에게 인스타그램이 유해하다는) 정보를 알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면 페이스북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을 기업이 알면서도 숨겼다면 사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영국에서는 지난 3월 런던에서 집에 가던 길 납치돼 목숨을 잃은 사라 에버라드 사건에 이어 9월에 사비나 네사가 공원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범 정책으로 9월부터 시행된 스트리트세이프는 아직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우범 지역을 파악하고, 이 정보를 정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되면, 소셜 미디어 기업의 사용자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여성이 표적이 되는 음란 영상물, 리벤지 포르노, 온라인 성희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